



2026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청렴·인권의 날

Part 1

지난 달 Feedback



Part 1 지난 달 주요 이슈



국민권익위원회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Brief

1	OECD, 각국의 반부패 법·제도 확대에도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성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 제시
2	공공조달의 뇌물·담합·이해충돌 위험에 대응해 공급망 실사, 청렴보증, 행동강령, 반부패 프로그램 등 공급업체 청렴관리 강화 추세
3	(사례) ABB, 이사회·경영진의 감독 아래 제3자 실사·모니터링, 내부 신고·조사, 데이터 기반 점검을 연계한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
4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와 입찰비리 등 부패 실태조사 강화, 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진단·컨설팅 등 하반기 반부패 정책 추진
5	프랑스 반부패청, Sapin II 법상 컴플라이언스 미비에 첫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며 기업과 경영진의 반부패 관리 책임 강화
6	국내 ESG 공시 법제화와 EU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이 추진되며 기업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필요성 확대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 | 글로벌 반부패 동향

2026 August | vol.164

www.acro.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8월 1일(매월발행, 통권 164호, 비매출)
발행인: 장일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상담
☎110

부패공익신고
☎1398

글로벌 반부패 동향

OECD, 각국의 반부패 법·제도 확대에도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위험 기반·성과 중심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 제시

국내 ESG 공시 법제화와 EU 역외기업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
이 추진되며 기업의 ESG·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필요성 확대



침묵을 깨는 용기, '내부고발'이 만드는 변화

조직 내의 비리를 외부로 알리는 일은 조직은 물론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자정 작용'을 함.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지난 달 부서활동 취합 결과

총 10개 부서 중 7개 부서 제출



Part 1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가족센터관리부

□ 규정을 넘어 실천으로

1.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글로벌 반부패 동향) 공유

- OECD 보고서 기반 부패 위험도·성과 중심 준법경영의 중요성 강조
- 글로벌 기업 리스크 관리 사례 공유

2.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안내

- 물품·용역 상품권과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의 선물 수수 기준 명확히 숙지
 - 2026년 9월 “청렴·인권의 날”을 운영하여
 - 대상: 전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총 245개소)
 - 각 가족센터 내부 교육, 회의 등 청렴·윤리 의식 향상 활동 장려
 -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청렴·인권의 날 활용 자료 배포
 - 청렴·인권의 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 ①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호, ②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카드뉴스 배포

교육운영부

□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및 사례 확인 외

- 청렴인권의 날 안내자료 공유
- 8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내용 공유
- 윤리 체크리스트를 통해 글로벌 반부패 정책과 이행 핵심 4가지 확인 및 공급망 청렴관리 체크리스트 확인
- 사례기업을 통한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강화 사례 확인
- 윤리네트를 통해 제3자와 거래시에도 부패 위험 확인 필요성 공유
- 국민 권익위 여름호 공유
-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공유
- 발전방향: 반부패 관리체계 구축 및 명절기간 청탁금지법 대상의 재확인을 통한 청렴·인권의식의 지속적인 함양

가족사업지원부

□ 청렴의 날 부서 부서 활동

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8월) 공유(글로벌 반부패 동향)

- 윤리 체크리스트 공유: 글로벌 반부패 정책과 이행
 - 공공조달 공급망 청렴관리 필요: 입찰계약 과정의 뇌물담합이해충돌 예방을 위해 공급업체 사전실사, 청렴서약, 내부통제, 교육 신고체계 및 계약 후 점검 강화 필요
- 기업사례 공유: ABB
 - 이사회 경영진 감독 아래 계약 전후 점검을 통해 거래처 관리 실시 및 신고 조사 결과를 내부통제 개선과 임직원 교육에 반영
- 권익위 및 국내외 동향 공유
 - 권익위: 신고자 보상금 수입회복액의 30% 확대 방안 추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 실시,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하반기 입찰비리 수당 부당 지급 실태조사 강화
 - 국내외 동향: 프랑스 반부패 관련 기업 경영진 첫 과징금 부과, 미국 법무부 사기 전담부서 개편, 국내 ESG 공시 법제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EU 역외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 공개

2.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여름호 공유

- 국제 반부패 협력 10주년 브리핑
 - 한국의 청렴도 평가신고자 보호제도 등 공유 및 AI 활용에 따른 개인 정보보호와 공정성 확보 논의
- 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호
 - AI 채용평가 과정 차별과 감시 위험에 대항하여 평가기준의 투명성, 이의제기 재검토 절차, 노동자 참여 및 재교육 지원 강조
- 내부신고자 보호 청렴문화 확산
 - 내부고발의 공익적 가치 강조, 익명신고 접근성 보복 방지 후속 조치 점검 필요성 제시

3.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공유

- 금지되는 경우와 허용되는 경우 등 선물 가능 범위 공유

Part 1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아이돌봄사업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월호 주요 동향 공유

1. 표지: ESG 공시 의무화 및 글로벌 준법 리스크 대응 윤리경영 동향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제작: 아이돌봄사업부)
2. 목차: ① 전문가 코칭 ② 국내외 사례 ③ 권익위 주요 정책
3. 전문가 코칭: ESG 정량 공시 강화에 따른 부패방지·공정거래 등 내부통제 정교화 필요
4. 사례 돋보기: 국내(해외법인 청렴 가이드북 제정) & 해외(뇌물 스캔들 극복 및 독립 감독 기구 구축)
5. 권익위 동향: 명절 계기 공직자 행동강령 점검 & R&D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6. 자율점검 4단계: 리스크 평가 → 규정 제정 → 교육 내재화 → 지속적 모니터링
7. 마무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전문 PDF 확인 가능

직장문화개선부

□ 청렴 인권의식 향상 사례 공유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공유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선물 제공이 금액과 관계없이 금지되는 원칙 및 직무 관련 선물의 허용 범위와 예외 기준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함

○ 가족친화인증 준비·문화컨설팅 추진 시 기업 및 컨설턴트 등 사업 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청렴 기준을 준수하고, 명절을 계기로 한 선물·편의 제공 등이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로 함.

○ 가족친화 네트워크 및 포럼 운영 시 참여기업과 유관기관 등 다양한 관계자와의 협력 과정에서 청렴한 업무 태도를 유지하고, 선물이나 호의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로 의견을 모음.

전략기획부

□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호 주요 내용 확인

- 글로벌 반부패 정책 동향 및 공급망 실사 기준 파악
- 규정과 실제 이행 간 격차해소방안을 살펴보고, 공공조달 및 공급망 청렴성 강화를 위한 우리원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 논의
- 책임 있는 반부패 관리체계 운영 우수사례 학습(ABB)
- 스위스 다국적기업 ABB의 '통합 윤리·준법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제3자 리스크 관리 및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참고하여 신뢰성 높은 사업 관리 도출 다짐
- 국민권익위 동향 및 국내외 반부패 정책 파악
- 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보상 확대(수입회복액 30%) 및 하반기 입찰비리 실태조사 강화 등 주요 정책 파악, 프랑스 AFA의 Sapin II 법 위반 첫 직접 과징금 부과,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반부패·ESG 트렌드 파악

□ 국민권익위 여름호 주요 내용 확인

-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및 한국형 반부패 제도 해외 사례 확인
- AI 기반 국민신문고 운영 및 현장 중심 고충·집단갈등 해결 사례 확인

□ 2026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주요 내용 확인

- 대상별 명절 선물 허용 범위 및 직무연관성 기준 파악
- 추석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 한시적 상향 파악
- 직무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명절 선물 금지 및 상품권 적용 기준 안내

Part 1 주요사례 및 경영제안 아이디어 공유

인식개선사업부

□ 글로벌 반부패 동향 속 공공기관의 나아갈 바

- 국제사회의 반부패 정책은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에서 사전예방, 투명성 확보, 책임성 강화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은 청렴을 단순한 법규 준수 차원이 아닌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인식해야한다.
- 그 방법으로 부패위험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 공정투명한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하여 전 직원의 청렴실천활동이 조직전반에 정착돼야 한다.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의 공정성과 책임성으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증진 시켜야한다.
- 궁극적으로 단순히 규정 지키기를 넘어, 일상에서 실천하고 국민 체감 청렴을 실현해야 하는 바 있다.

가족상담서비스부

□ 청렴/인권의 날 자료 공유

[자료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8월호 (글로벌 반부패 동향)

1. 글로벌 반부패 정책과 이행
->반부패 관리의 범위가 조직 내부를 넘어 거래 상대방과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음.
2. 글로벌 반부패 관리체계 강화
->전사적 반부패 프로그램으로 윤리,준법 경영 실천

[자료2] 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뉴스레터 여름호

- 침묵을 깨는 용기, "내부고발"이 만드는 변화 :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

[자료3]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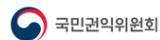
-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허용되는 경우 :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 제한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 일반선물 5만원/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15만원까지 가능(명절기간에 한정하여 30만원까지 허용)
- 특정한 물품 또는 수량이 기재된 물품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Part 2

이달의 주요 ISSUE

[자료1]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월호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9월 | 공급망 관리와 윤리경영

2026 September | vol.165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9-06

Brief

1	ILO는 일본 전가·전자업계의 SPP 사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등한 대화와 교육·전문가 지원이 공급망 인권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
2	공급망 실사는 인권·노동 위험뿐 아니라 담당자의 금품수수·이해충돌을 함께 관리하고, 협력사의 부담 완화와 개선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 필요
3	(사례) 미국 농산물 공급망 기업 Scoular, 통관중개인을 통한 멕시코 공무원 뇌물 사건으로 1,000 만 달러 합의 후 제3자 심사 승인, 계약상 반부패 조항, 고위험 거래 통제와 준법 조직 재편으로 공급망 부패위험 관리 강화
4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 성과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및 신고자 보상 예산 확대로 신고자 지원 강화
5	정부, 공공계약 비리·보조금 부정수급·전관유착 등을 중점 반부패 과제로 설정하고 AI 기반 부패 적발 등 관리체계 강화
6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500 만 달러 이하 내부고발 포상금에 원칙적으로 30% 포상률을 적용해 신고 활성화와 제도의 투명성·예측 가능성 강화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년 9월 1일(매월발행, 통권 165호, 비매물)

발행인: 장일연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신청: 044-200-7166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일반민원상담

☎110

부패공익신고

☎1398

협력사와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업계 공동의 경영진 교육, 실무 워크숍 및 전문가 상담은 협력사의 반복적인 자료 대응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함.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는 인권 노동 위험과 함께 담당자의 금품수수 이해충돌을 관리하고, 자료 요구의 필요성과 비례성 점검 필요



2026년 국민권익 가을호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청렴의 기준을 세워온 시간, 공정과 신뢰의 내일로
규정에 가려진 마음, 권익이 살핍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권익제도 솔루션
생활 속 청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추석 선물에 관한 오해와 진실



Part 3

부서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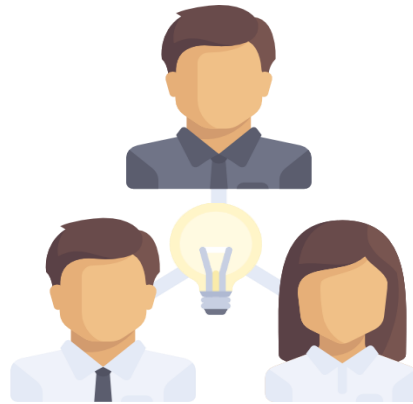
매월 셋째 주는 '청렴·인권의 날'입니다.



10월 '청렴·인권의 날' 부서활동 제출기한 : 11. 18.(수)



게시판을 통해 안내되는
이달의 주요 이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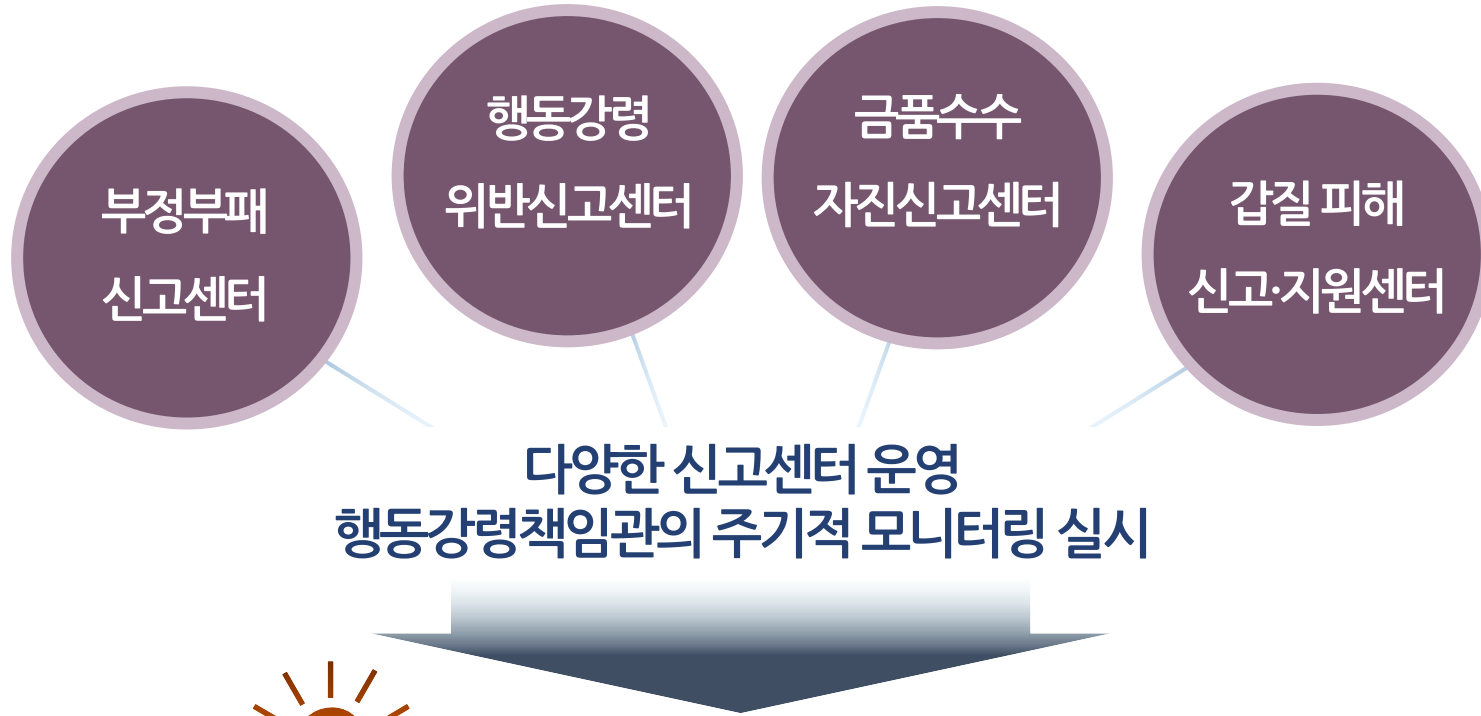
부서회의 등을 통해
안내된 자료 공유, 활동 실시 후
실천사례, 경영제안사항 등 논의 및 도출



청렴리더(부서활동담당자)는
도출된 내용을 정리하여
윤리감사실로 제출

(양식 활용하여 메신저, 메일 등으로 전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클린신고센터 운영 안내



내·외부 신고 접수 및 조사, 처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신고·진정·제보 등 사안별 조사 후 필요에 따라 특정감사 연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 노력



윤리감사실

핫라인
clean@kih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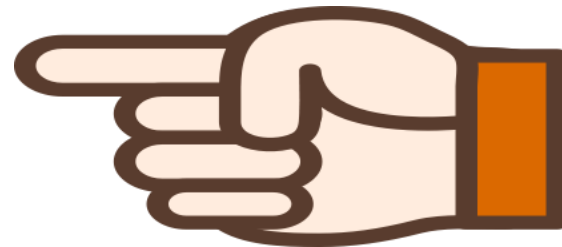
청렴포털
clean.go.kr

홈페이지
www.kihf.or.kr
[국민소통] - [신고센터]

갑질옴부즈만
yooppang@naver.com

아니, 이런것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합니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목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갑질 근절 이행지침을 기반으로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에 대해

- ✓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 ✓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 ✓ 갑질 예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알기쉽게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갑질 발생 시 처리요령



갑질행위 신고,
제보

가해자, 피해자, 사건관계인
그 누구라도
KIHF홈페이지,
윤리감사실 핫라인,
옴부즈맨을 통해 신고·제보

01



사실관계
조사

신고, 제보 등을 받은 전담직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대처와
개인정보 보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02



조사결과
조치

조사결과와 갑질이 확인되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03

갑질유형



✓ 인격 비하, 모욕적 언행

욕설,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



✓ 음주나 흡연 강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나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업무 불이익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외 업무지시를 하는 유형



✓ 비인격적 대우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갑질 신고센터



KIHF홈페이지
www.kihf.or.kr
[윤리·인권경영] - [신고센터] - [갑질신고]



윤리감사실 핫라인
clean@kihf.or.kr

갑질 근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렴으로 깨끗하게 존중으로 따뜻하게